



2010년 지방재정세제 전망 및 운용방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정 현 율

경제전망과 지방재정 여건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연간 5%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경기회복 추세가 민간설비투자, 재고조정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물가는 3% 내외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지역경기도 제조업생산, 대형소매점 판매업 소비 및 민간부문 건축 공사실적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로 나타나고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이다.

다만, 지방세입의 경기후행적인 특성,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강화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소폭 증가,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자치단체 세입예산은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인 9.5%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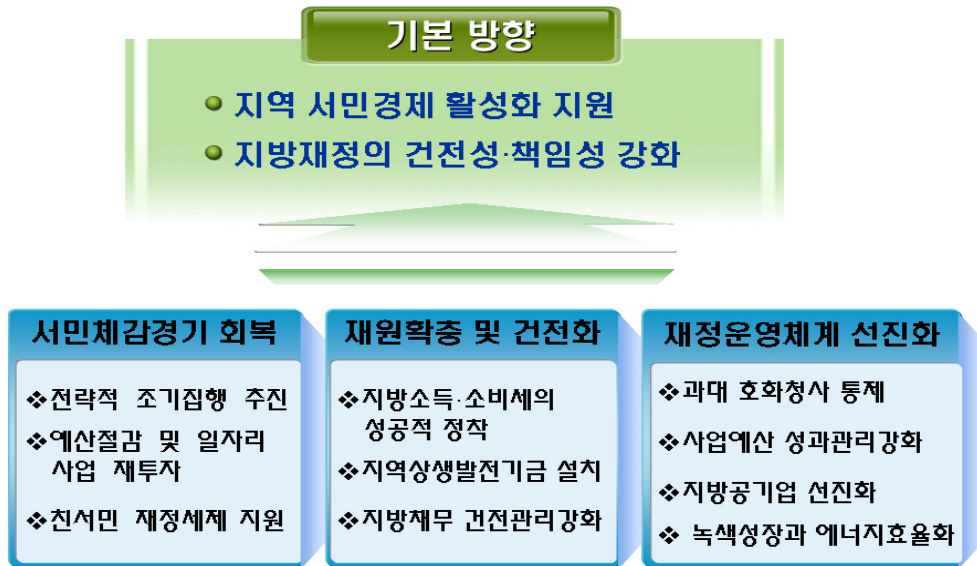
또한, 세출은 경제위기로 노정된 취약 계층의 고용부진, 소득감소 등으로 서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일자리 사업소요와 복지예산 지출요구가 증가하고, '09년 지방채 발행확대에 따른 부담으로 세출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지방재정 운용방향

국내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나, 고용 부진,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의 불

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재정이 서민생활, 중소기업 등 지역 현장경제와 접점을 두고 있어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이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어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서민체감경기 회복 지원과 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지방재정구조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 실천 과제

1. 서민체감경기 회복 지원

□ 전략적 조기집행 추진

‘09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더블딥 우려, 고용 부진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예산의 60%를 집행한다는 목표하에 민생 안정, 일자리 사업 등 중점과제에 대한 집행실적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여 서민체감경기의 효과적 부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보도블럭 교체, 불요불급한 물품의 과다 구매 등 중복·낭비적 예산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체계적 집행계획에 따른 내실있는 사업추진, “예산집행실명제 및 “클로징 by 10 시책” 확산 등 건실 집행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원활한 조기집행 촉진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자금배정, 긴급입찰제도, 선금지급비율 확대 등 행정절차·기간 단축 및 민간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각종 비상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 낭비성 예산 절감 및 일자리 사업 재투자

행사·축제, 민간이전, 경상·소모적경비 등 선심·낭비성 예산항목을 공개하고 예산효율화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절감·구조조정하여 일자리 등 생산적인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신고·자율감시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고, “예산절감성과급”이 주민까지 확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친서민적 재정세제 지원 강화

인구 급감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세제 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정착과 생활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50%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여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큰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동차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 자치단체의 서민생활 사회복지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변경하여 전액 균형재원으로 교부되도록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 및 구조조정을 거쳐 사회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촌지역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하여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지방재원 확충 및 건전화

□ 자주재원의 지속 확충

‘10년부터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난 10여년간 숙원과제였던 지방소득·소비세를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 선순환 구조 형식으로 실질적인 재정자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5%(약 2.4조원)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게 된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13년부터는 과세자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지방소비세 중 일정비율을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비수도권의 지역일자리, SOC 확충, 지역개발 등 각종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것이다.

향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기준 등은 자치단체간의 합의(조합규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채무 건전관리 강화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차원에서 각종 SOC,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지방채무가 다소 증가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높이게 되어 지방채무 건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에는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지방채 발행 관련 비상조치를 정상화하여 지방채 총액한도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포괄 지방채 발행 제한과 함께 채무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진단 등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방채무 증가됨에 따라, 재정위기의 단계별 요건, 결정절차, 효과 및 재정건전화 조치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에 대한 설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3. 지방재정 운영체계 선진화

□ 과대·호화청사 통제 강화

성숙한 지방자치에 부응하도록 호화·과대 청사 신축이나 비효율적인 청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투·융자 심사 및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여 청사 신축을 엄격히 통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 청사 면적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기존 과대청사의 적정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사 관리상황, 단위면적당 건축비, 기준 초과 면적 및 교부세 역인센티브 부여 내용 등을 공표하여 자치단체 자율적인 조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사업예산 성과관리 및 재무회계 선진화

재정성과와 예산편성을 직접 연계하는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를 추진하고, 자치단체 사업·서비스 원가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체계, 자치단체 - 공사·공단간 연결재무재표 작성으로 자치단체 재무회계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민간보조경비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편성,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이 강화되도록 필요사항을 법제화하여 재정사용 및 전달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공기업 선진화의 지속 추진

지방재정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관리, 공시제도 활성화 등 자율·책임 경영의 거버넌스체계를 마련하고, 경영평가·진단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방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개선노력을 유도하고, 부실 방만하거나, 유사·중복 문제기업에 대한 청산·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등 구조조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감

미래 성장 동력·新국가발전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재정세제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 이용효율화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기술개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녹색성장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시, 녹색성장수요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술·산업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 친환경·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치단체 청사관리에 있어서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에너지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전면 유리창 설치 지양 등 에너지 절약형 설계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